

한반도 동향

2023년 3월

- I. 한반도 일지
- II. 북한 매체 주요 보도
 - 1. 대 내
 - 2. 대 외

편집책임	장철운 통일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세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작성 자	권주현 북한연구소 연구원	안정은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아영 인도협력연구소 전문연구원	윤훈희 인도협력연구소 전문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소 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이 달의 주요 동향

한국

한·미, '2023 자유의 방패(FS)' 및 '결정적 행동' 등 연합연습 실시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尹 대통령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북한

김정은, 핵무기 병기화사업 지도 ... 핵반격 작전계획 및 명령서 검토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농촌문제 강조 ... 미사일 등 발사·시험

미국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간' ... "北, 김씨 일가의 권위주의 국가"
 일본과 동해 상공에서 공중 전술훈련 실시 ... 북·러 간 협력 주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재선출 ... 시진핑 방러 및 중·러 정상회담 개최
 2023 해양안보벨트 해상연합훈련(러·이란 등 참여) 및 캄보디아와 연합군사훈련 각각 실시

러시아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결정 ... 러 전투기, 美 무인기와 흑해서 충돌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원 정례 핵전략 훈련 시작 ... 쿠릴열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일본

미국과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 서명
 2023년도 방위비 26% 증가 ... 독일·인도·우크라이나·폴란드와 각각 정상회담

I

한반도 일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1. (수)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3일회의 진행(2.28.)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의 농촌발전 전략과 경제정책의 실행을 촉진할 수 있는 과학적·현실적·동원적 대책안 수립 관련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 진행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제104주년 3·1절 기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절 만세운동)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 - “日,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 “북합위기와 심각한 북핵위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 - 日 마츠노 관방장관, “한·일관계를 건전한 모습으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불법 외화벌이 활동 북한 기관 3곳·개인 2명 추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행정명령 13687에 따라 외국에서 불법으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콩고아콘드SARL(Congo Aconde SARL) 등 3개 기관과 북한 정권과 노동당의 수익 창출 활동에 종사해온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 OFAC에 따르면 칠성무역공사는 북한 정권에 속한 무역회사로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한편, 정보요원들을 직원으로 위장 고용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조선백호무역공사는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 1980년대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술 및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조달 - 또 황길수와 박화성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콩고아콘드SARL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콩고민주공화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및 조각상 설립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총리 국회 질의응답, ‘향후 미국의 타격력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아닌, 반격능력 운영에 대해 미·일이 협력하여 대처해 나갈 것...반격능력은 국민의 생명 및 삶을 지키기 위한 ‘방패’ 능력’
3. 2. (목)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26.~3.1., 당중앙위 본부청사) 내용 종합해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새로운 농촌혁명강령 실행의 첫해 사업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의 분석과 평가 및 결론 《올해 농사에서 나서는 당면과업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에 대하여》 진행 - 1)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정형과 일련의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2) 인민경제계획 수행규율을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 3)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4) 조직문제 등 4개 의정을 전원일치로 승인 - 김정은, 폐회사에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농촌을 사상정신적·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당중앙위 제8기 제14차 정치국회의 진행(3.1., 당중앙위 본부청사)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원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사회, 정치국 상무위원 및 위원, 후보위원들 참가 - 농업발전계획과 중요 경제문제를 반영한 결정서 초안 심의 -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 일부 조항 수정보충 관련 논의 진행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2. (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작년 9월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제안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하루빨리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행사 기념사)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협력 등을 통해서 北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 임원진 면담) • 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사무처’ 포함 조직개편 검토...“남북관계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개편, 연락사무소는 조직개편 대상이 아냐” - 교류협력실은 ‘국’으로 축소 및 교류지원과 등의 일부 과 폐지안 논의 • 통일부, “北, 전원회의에서 가시적 대책 없이 기존 구호 반복”(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당 중앙위원회 제8기 7차 전원회의 관련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개선책을 모색했으나, 새로운 내용보다는 ‘과학농사’ 등 기존방안 재강조” - “北 구체적 평가가 없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과시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앞으로 농촌 당조직을 통한 주민 통제·동원 등 기존 정책을 지속할 것” - “北 연초부터 규율을 강조하는 것은 北 당국의 계획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 외교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임시 TF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차원의 TF와는 별도의 외교부 임시 조직으로, 부서 간 업무 연계와 협조를 가속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창설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美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 관련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있을 경우 유관부처, 업계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외교적 지원 할 것”(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초까지 美 상무부와의 협상 및 협의 과정을 통해 보조금 규모와 지원 조건 논의”
	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中 상무부 부장조리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환경에 맞춰 한·중 경제 관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 등 양국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지속 소통 노력
	한·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UNDP 연례정책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며,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활동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요한 한 축이 될 것” - UNDP 서울정책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UNDP 서울정책센터의 활동 성과 및 향후 3개년(2023~2025) 활동 계획을 점검·승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악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악관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명시, “이들 정부를 포함한 다른 독재국들이 발전된 사이버 능력을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규칙과 인권을 무시한 이들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 - 특히 “중국이 민간과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지난 10년간 중국은 사이버 활동을 지적 재산권 탈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고 지목 -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란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2. (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장관, “한국 등과 협력해 北 도발 대응…인·태 억제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 직원들에게 보낸 업무 지시 관련 메모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서 계속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콘셉트와 능력을 개발하고 동맹과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억제력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 팀은 핵 3대 전력, 우주, 사이버 공간, 장거리 화력, 전투기 등에서의 차세대 역량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부연 • 국방부 차관보, “김정은, 위협 감수 못하도록 확실히 하는 데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난 몇 달간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요소와 미국의 확장억제 요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전략 자산 재전개, △실사격 훈련 재개, △차관급 확장억제 협의, △한국 정부 관리들의 미국 전략자산 기지 방문, △최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개최 등의 사례를 언급 - 라트너 차관보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과 관련, “이런 활동의 목표는 분쟁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지만 김정은이 미사일로 많은 물고기를 죽이는 것을 막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준비태세와 억제력이다. 우리는 김정은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위협을 감수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
	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중국 28개 기업 수출 제재…중국군 현대화 지원, 대이란 제재 위반, 자국민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미국은 핑퐁거리를 날조해 중국 기업을 탄압’ - 中 상무부 대변인, ‘미국의 시장 왜곡 행위에 결연히 반대…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강 외교부장-독일 외무장관 회담 뉴델리서 개최(G20 외교장관회의의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정치적 해결과 화해와 평화 촉진 입장을 견지…유관 국가는 균형되고,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유럽 안보 구조를 건설해야 - 獨, 중국이 위기 해결을 위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희망…중국과의 인적 교류 심화 희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0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 채택 없이 폐막
3. 3. (금)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북한인권법 제정 7주년에 따라 국회 협력 요청(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국회가 법 제정 당시 보여준 초당적 합의 정신과 지난 20년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외 시민사회의 염원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 통일부, “北 청년 대규모 동원…통제 및 기강잡기와 함께 北 당국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 유도”(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동원한 청년 주도의 건설 과업을 통해 향후 지방의 건설기술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 국방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교란·파괴할 수 있는 군 작전개념(‘킬웹(Kill Web))이 공식화 - AI(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최전방에 배치해 GP(비무장지대 소초)와 GOP(일반전초) 경계작전을 맡기는 체계 구축 - “3축체계의 킬체인은 최정상 지휘자가 발사단계에 따라 모든 것을 결심하지만 킬웹은 거미줄 같은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다수 중간 지휘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3.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국회의장에게 “北 인권 상황 심각, 북한인권재단 이사 서둘러 구성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코로나19 장기화와 의학적 대처역량 부족, 자연재해, 국경봉쇄 등이 겹쳐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등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 “북한인권법 제5조 2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도 조속히 추천 필요”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안보실 채널 가동을 통한 ‘강제징용배상 돌파구’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외에도 다른 채널이 가동 중이며 양국 안보실 간에도 충분한 협의 이뤄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기자 인터뷰)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일본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 동시에 가동
	미·일·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쿼드(Quad) 외교장관 회담 개최,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들은 2일 회담 개최 후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 -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헌신할 것임을 재확인한다”라며 북한에는 UNSCR의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
3. 4. (토)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수정보충 정령 채택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신임 베트남 주석(보 반 트영)에 축전 발송(3.2.) 보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 “9·19 위반 도발에 상응조치 대응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앞두고 北 도발 위협이 이어짐에 따라 9·19 군사합의 위반 시 北 완충구역으로 사격 준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러시아, 제3국을 통해 서방제재 우회하여 반도체 및 집적회로 등 수입 정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등을 통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용 장비와 무기 생산 등에 사용” • EU, 헤이그에 국제 침략범죄 기소센터(ICPA) 설립
3. 5. (일)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3.4., 조선중앙통신)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동원한 한·미 연합공군 훈련이 실시된 것과 2월 24일 한·미 국방부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는 보도문을 발표한 것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무책임한 긴장격화 행위로 한반도와 지역정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 -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국과 미국에게 도발적인 언행과 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대륙위원회 성명, ‘중국은 대만인들이 중화민국의 주권·민주주의·자유를 고수하는 것을 존중해야’
3. 6. (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국제우주조약 가입 14주년 관련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 기자회견 진행(3.5., 조선중앙통신) 보도

일자	구분	주요 내용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3월 5일과 10일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외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각각 가입함으로써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우주활동이 국제법적으로 담보 - 북한은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 인공위성의 다기능화·고성능화를 위한 사업에서 부단한 진전을 이루고 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 개발에 성공 • 각급 당조직,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결론문헌 집중학습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당위원회와 시·군당위원회, 농업위원회·기계공업성·건설건재공업성·전력공업성 등 성·중앙기관 당조직 등에서 학습 진행
3. 6. (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 -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 • 한국 정부, 日 강제징용 해법 발표(박진 외교부 장관 정부입장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 -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 -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라” - “반쪽짜리 해법 동의 않아…日 호응으로 더 채워질 것 기대” - “경제계 미래지향적 기여 검토…日도 자발기여 반대 안해” -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기업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지만 日 피고기업은 제외 -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는 마지막 기회” - “장기간 경색된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위치를 감안해 장기적 안목으로 (해법을) 봐 달라” • 외교부, “日 강제징용 피해보상에 대한 韓 주도의 ‘제3자 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아” • 日 강제징용 韓 피해자, “韓이 日기해기업 면책 생존 피해자 3명 모두 강제징용 해법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정부에게 저자세로 일관해 日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日의 그 어떤 재정적 부담도 없는 오늘의 굴욕적인 해법”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공군, 6~10일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첫 ‘쌍매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훈련에는 공군 F-15K 전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등 총 10여 대의 항공 전력과 조종사·정비·지원 요원 등 임무 요원이 참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6. (월)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련(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미래청년기금'(가칭) 공동 조성 방안을 마련 • 韓 산업통상자원부 - 日 경제산업성, "한·일 수출규제 관련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양자 협의 신속히 진행 예정"(현안 기자회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기사다 총리,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 -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재검토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노동자문제(강제징용)와는 다른 문제임. • 하야시 외무상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공동선언을 포함,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는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 - (3월 7일) (미츠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부를 막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본 정부는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
3. 7. (화)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월 24일 '북한이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 즉시 격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한국 언론의 3월 6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령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발언 - 이는 "엄청나고 미친 망발"이며, 미국의 관할권이 아닌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를 경우 "두말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 될 것"이라고 경고 •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3.6., 조선중앙통신)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6일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B-52가 동원된 한·미 연합공군훈련이 진행된 것은 "조선반도 지역정세를 헤어나기 힘든 구렁텅이로 보다 깊숙이 밀어넣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며,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핵 사용 기도가 실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 - 또한 3월 13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의 침략적 성격과 이에서 초래될 "파국적인 정세격화"를 경고하고,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표 - 국제사회는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평화 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하여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7일 오전 9시경 적이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사격장에서 30여 발의 포사격 도발을 감행했으며, 이는 "조성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엄중한 무력도발 행위"라고 비난 - 적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 - 합동참모본부, 해당 훈련이 이뤄진 바 없다고 반박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도훈 외교2차관, IAEA서 "오염수 배출 日책임있는 대응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수 배출 계획 검증 결과를 포함한 종합보고서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하고 IAEA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등 이해관계국의 전문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검증 참여 필요성을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7. (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日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따라 “한·일 및 한·미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 (정례브리핑) • 외교부 “北 ‘위성발사 국제법적 정당’ 주장은 명백한 허위”(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 외교부, “日 강제징용 피해보상 관련 日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요청은 할 수 있는 게 아냐”(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해법은 대일 협상 결과가 아닌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독자적 해법을 발표한 것” - “日 정부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한·일 간 역사상 이처럼 포괄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선언은 없었다고 생각” • 국정원, “北, 핵훈련·신형 ICBM 및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 전망(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 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 ICBM을 발사할 소지 있어” - “김정은 국무위원장 첫째가 아들이란 점에 대해서는 대북정보기관 포함해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외부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확인” - “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와 관련, 4대 혈통 세습의 당위성 각인 목적이 유력한 김주애 띄우기의 동기” - “아사자 발생은 북한의 양곡 정책, 유통과정의 문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측…체제 위협 정도는 아냐” • 정부, 美 주도 대중국 견제협의체 쿼드(Quad) 실무그룹 참여 “적극 공감”(고위당국자 워싱턴D.C. 특파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쿼드에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尹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 - “尹 대통령이 후보 시절 쿼드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간접적 기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획의 창이 열릴 때 들어갈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안보실장 회담(워싱턴 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동맹 70주년 및 4월 26일 국민방문에 대한 양국 현안 논의 - 설리번 보좌관, “日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제3자 지급 방침에 대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美 두 핵심 동맹이 협력을 강화할 문을 열었다고 환영”
	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외교차관보 면담(자카르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 아세안+3(한중일)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계기로 중국 측 SOM 대표인 농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면담 진행 - 양측은 면담에서 한중 양국이 코로나19 방역상황 완화를 계기로 여러 층위에서 인적 교류 재개, 경제 협력 및 상호 우호정서 증진을 포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확인 - 또한 한·중·일 3국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3국 협력의 발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자는 입장을 확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야시 외무상, ‘강제징용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정부가 원고(피해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한국) 국내 프로세스를 통해 이번 조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러시아·아프가니스탄의 고위 인사 등에 대한 제재 단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대상은 총 6개국 국적의 개인 9명과 기관 3명이며, 러시아 경찰관 2명과 우크라이나에서 조직적 성폭력을 자행한 러시아 특수군 및 고위 인사 포함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8. (수)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도훈 외교부 2차관-IAEA 사무총장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 북핵 활동 동향 논의 - "IAEA가 실시 중인 일본 오염수 검증 활동에 한국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 등 이해관계국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 요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국(DNI),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 -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야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 -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8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역내 안보 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공격적이며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 • 국무부, "한·일과 함께 억제력 강화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3국이 새로운 확장억제협약체 창설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프라이스 대변인은 즉답을 피하면서 "우리는 확장억제 공약을 심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왔다"고 답변 - 이어 "최근 몇 년, 또 최근 몇 달간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3국 협력"이라면서 "우리는 한·미, 미·일 간 양자 측면도 중요하지만 3자 협력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는 3국이 직면한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비전에도 중요하다"고 강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우크라이나에 최소 10억 유로(약 1조4천억원) 규모의 탄약 추가 지원 계획 발표 • 대만, 적군 상륙 격퇴 모의 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3월 8~9일 타이완인사 주웨이항 인근 해안, (2차) 4월 12~13일 타이둥시 즈번 해변
3. 9. (목)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에 3월8일혁명 60주년 축전 발송(3.8.) 보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덕수 국무총리, 日 강제징용 해법 관련,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여러 전문가와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 외교부, '韓 쿼드 참여 中 비판'에 "가능적 협력" 강조(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신형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쿼드와의 기능적인 협력을 우선 추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 없어" •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 日 강제징용 해법 관련 "韓과 日에 관한 것만은 아니며, 美와 우리의 관계,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과 관련된 것"(KEI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행사 발언)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10. (금)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화성포병부대 현지지도 및 화력습격훈련 참관(3.9.)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훈련결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실전가상훈련 강화를 통해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3월 9일 오후 남포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였다고 발표 • 김덕훈(내각 총리), 평양시 새 거리 건설장과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 현지요해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세 통일부 장관,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중요, 실천적 조치 취해야”(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순간에도 북녘 동포들은 일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 北 인권문제는 같은 민족으로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는 절박한 문제” • 외교부 “日피고기업 강제징용 ‘미래기금’ 조성 참여있을 것”(고위당국자 외신기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에 대한 참여는 지금 단기간 내 피고 기업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어” - “다만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 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北, 지금은 도발 국면...대화·외교로 방향 전환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도발하는 시기도 있고 (대화에) 관여하는 시기도 있는데, 현시점은 도발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 또한 북한이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한 뒤 “이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비판 - 이어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국가정보국(DNI)의 보고서가 갖는 외교 정책적 의미와 관련, “정보와 정책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그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현재 정보 평가 및 분석이며 정책은 별개”라고 답변
	미·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짧은 면담에 대해 건설적이었다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핵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및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원인을 직시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함께 추동하길’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야시 방위상 기자회견,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큰 흐름 속에 방위성, 자위대는 당국 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 할 것...개별 교류 안전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해나갈 것’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시 수네 영국 총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이주 근절대책, 우크라이나 해군 공동 훈련, 인도태평양 안보 위한 항모배치 조정 등 합의 • 중국 베이징에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지 7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하고 향후 2개월 안에 상대국에 대사관을 개설할 것에 합의 - 알리 삼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NSC) 의장이 중국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측 파트너인 무사드 빈 무함마드 알아이반 국가안보보좌관과 4일에 걸쳐 회담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11. (토)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 3연임 관련 축전 발송(3.10.) 보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IOC 후원사에 공개서한을 보내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파리올림픽 출전을 막아달라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문화부 장관 명의로 삼성, 코카콜라, 비자 등 IOC 최고 등급 후원사인 TOP(The Olympic Partner) 13개 기업의 영국 내 최고 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고 “현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정치와 스포츠는 매우 깊이 얽혀있으며, 그들의 정치 선전을 위해 스포츠를 이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3. 12. (일)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5차 확대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지도, 당중앙군사위 위원 및 국방성 지휘관들, 군종·군단 지휘관들 참석 및 당중앙위 관련 부서 간부들 방청 -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역들에 군대를 파견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투쟁을 조직·전개할 것과 군대의 중요 정치군사 활동 방향 및 대책적 문제를 토의 - 김정은, 사회주의농촌 건설과 경제발전에서 군대가 투쟁의 주체가 되어 단계별 목표들을 무조건 결사관철해야 한다고 발언
3. 13. (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위원장이 련포온실농장에 보낸 차량·기계설비 전달모임 진행(3.10.) 보도 • 전략순항미사일 수중 발사훈련 진행(3.12.)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함 《8.24영웅함》을 동원하여 3월 12일 새벽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 발사 - 당중앙군사위는 훈련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훈련을 통해 현 정세를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통제·관리할 군의 입장이 명백히 표명되었다고 보도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성 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비공식 모임이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벌려놓으려고 기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비열한 《인권》 압박 소동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발표 -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 책동은 진정한 인권보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조선민민의 진정한 권리와 리익을 말살하기 위한 가장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 - 북한은 국가의 자주권과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장 비열한 적대모략 책동에 초강력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한다”고 발표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美반도체법 피해 최소화 및 국익 최대화 위한 협상 진행 중”(핵심 관계자 기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北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주장 관련, “여러 이유에서 도발…면밀한 상황 관찰하면서 필요할 경우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어” • 통일부, “北 도발 매우 유감, 긴장고조로 얻을 것 없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13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반발 군사적 대응조치를 본격화하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 및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중단 촉구 • 日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불허’ 의사 공식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모두 ‘제3자 변제 불허’ 의사 전달 - 외교부, “재단 변제금 수령 여부는 원고의 개개인 법적 권리로 각자 입장에 따라 결정… 피해자 및 유족 한 분 한 분 직접 보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할 것” • 합참, “12일 아침 北 신포 인근 해상의 北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미상 미사일 포착”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13. (월)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연합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실시하며,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으로 훈련 진행 - 美 차세대 정찰·전자항공기(ARES) 한반도 상공 출동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1차 회의(3.5.~13.)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5차회의 개최(3.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국가주석 재선출, 한정 부주석 선출,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 취임 - 시진핑 주석 폐막식 연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 전 당과 전국 인민의 중심 임무...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건설 전면 추진...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추진...조국 통일의 대업을 건설히 추진...당의 영도와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 견지' - 입법 개정안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 발전관'과 함께 입법 시 지도 이념으로 삼아야할 이론·사상으로 추가...'공산당 영도'가 '헌법 준수'보다 우위로 변화
	UN·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러시아 간 흑해 곡물협정 연장협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은 흑해를 통한 곡물·비료 수출 활성화가 세계 식량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 보고, 러시아 측의 요구사항을 듣고 해법을 논의하며 상응하는 조건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
3. 14. (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황해남도 청단군, 연안군, 배천군의 여러 농장 및 간석지 건설 종합 기업소와 덕달광산, 김종태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등 현지요해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오커스(AUKUS)의 호주 핵 추진 잠수함 조기 공급 관련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협력 지지"(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재래식 무장, 원자력추진잠수함 등을 위한 협력과 관련해 그간 해당 3국과 국제사회 간 투명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 점을 평가" • 외교부, 日 강제징용 갈등에서 파생됐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진전사항이 있을 것"(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한·일 유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 합참, "北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20km 비행 후 동해상 탄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 즉각 중단 촉구" • 국립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지침서에 5년 전 삭제되었던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 다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인권실태 강조 및 '평화' 단어 삭제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북핵대표 北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관련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명백한 위반"(전화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 강조 및 강력 규탄"
	미·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 흑해 상공서 충돌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창 총리 기자회견, '새 정부의 중점 업무는 당 중앙의 결정과 배치를 잘 관찰하고 실행하며, 20차 당대회가 수립한 청사진을 시공도로 만들고, 전국 인민과 함께 웅대한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드는 것'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미연합훈련에 엄중 우려'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14. (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츠노 관방장관 기자회견, '북한 탄도미사일의 일본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낙하 여부는 미확인'
	일·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총리, 호주 총리 전화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핵잠수함 도입 계획과 함께 NPT 체제에 대한 지속적 참여 설명 - 日, AUKUS에 대한 지지 표명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틴 대통령, 국영방송 로시아1 인터뷰에서 미국의 '러시아-독일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 폭파 우크라이나 배후설'에 "난센스"라고 일축하며, 폭파 사건의 배후는 미국이며 유럽이 미국의 움직임에 종속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비판 • 러시아, 오커스(AUKUS)의 호주 핵잠수함 조기 공급 관련 핵비확산 원칙에 우려 제기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이 오커스와 같은 기구를 만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군사시설을 아시아로 확장하면서 아태지역에서 장기간의 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형사재판소(ICC), 러시아의 전쟁범죄자 처벌을 위한 체포영장 청구 방침...러시아는 2016년 ICC 탈퇴했다며 부인
3. 15. (수)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진행(3.14.)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사격훈련 진행,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관련,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 신호 기대"(日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징용과 관련해 19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은 정치를 하기 전 (검찰이라는) 법률가로 활동할 때부터 이런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제3자 변제는 '내가 생각한 것'" - "악화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어...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 -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 지도자가 해야만 하는 책무" - (정권교체에 따른 日의 우려 관련)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려...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 (日 G7 尹 대통령 초청 검토 관련) "참석하게 된다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강력한 협력을 구축할 기회가 될 것" - 日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 표명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통일로 나아갈 중요한 목표와 과정을 담은 청사진이 필요"(통일 미래기획위원회 첫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 해결이 통일 문제의 출발점, '담대한 구상'의 실천을 위한 이행 방안의 구체화와 공론화를 위해서도 노력 필요"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15. (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北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 세탁한 '믹싱' 업체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2017년부터 최근까지 30억 달러(약 4천억 원)가 넘는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필요한 믹싱(mixing) 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 암호화폐 플랫폼 칩믹서(ChipMixer)를 단속했다고 발표 - 법무부는 독일 당국과 함께 칩믹서의 도메인과 서버, 4,6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압류했다고 밝혔으며, 칩믹서가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APT38이 2022년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업체 '엑시 인피니티'와 2020년 블록체인 기술기업 하모니에서 훔친 암호화폐를 포함해 7억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세탁했다고 설명 •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 "한국과 핵잠수함 기술 공유 계획 없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부차관보,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의 입장에서 미 해군의 핵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외교차관 통화 "북한의 도발 규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에서 지난 6일 한국과 일본 정부의 발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기여한 것이라며 환영 의사 표명 - 이어 북한의 ICBM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중요성 강조 - 또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를 통한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오커스(AUKUS) 안보 파트너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것임을 재확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한반도 정세가 오늘에 이르게 된 원인은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응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고 무력 위협을 강화했기 때문' (정례브리핑) • 시진핑 주석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 연설,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칭하거나 확장을 꾀하지 않을 것' • 2023 해양안보벨트 해상연합훈련 개최(3.15.~19.), 러·이란 등 참여
3. 16. (목)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내각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3.15.)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리영식(내각 당위원회 책임비서) 진행 • 2022년 중요공업부문, 수산, 양어부문과 제약공장들 사이의 사회주의 경쟁총화회의 진행(3.15.)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승호(내각 부총리), 리두성(당중앙위 부장) 등 참석, 박인철(직총중앙위 위원장) 총화보고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北,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17형'(추정) 고각 발사, 정점 고도 6,000km, 70분간 1,000km 비행 - 尹 대통령,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 • 통일부, 탈북민 정착지원금 900만 원으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발표 - 1인 세대 기준 800만 원씩 지급되던 정착기본금을 100만 원씩 인상 및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를 상향 조정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16. (목)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부부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정상 '서둘 외교' 복원 및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 한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일본,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는 조속히 원상회복 되도록 논의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합의 및 한·일 당국 간 안보대화,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 -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협력 및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조 - 전국경제인연합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함께 창설 발표 -尹 대통령, "이번 회담은 DJ-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 - 기시다 총리,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조치는 어려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尹 대통령 "구상권 행사는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한·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북핵대표 "尹방일 출국전 北미사일 발사는 중대 도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3자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 -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출국 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임을 강조 - 이들은 이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러한 불법적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잇단 북 도발 주시...대북 억제력 작동하고 있다"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역내 불안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안정과 인보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 - 한·미 군사훈련 중에 북한이 도발하는데 대북 억제력이 작동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수행하는 훈련들은 방어적 성격이며 역내에서 잠재적 도발을 억제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
	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미·일 인터넷경제에 대한 정책협력대화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은 3월 6~7일 개최한 제13차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연결 및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 - 대화에는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안전한 5G 무선 기술,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촉진에 대한 양국의 민간 부문 대표와의 토론이 포함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우크라이나 외교장관 전화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중국의 인도적 지원에 감사...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대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정례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역사 문제를 솔직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다루어야 할 것...한·중·일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중국은 지역 내 배타적 그룹 형성을 반대, 한·일 관계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에 진전을 가져다주길 바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츠노 관방장관 정례기자회견, '북한의 ICBM,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낙하 확정...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대응방침 의논'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17. (금)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3.16.) 및 김정은 현지지도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045km 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km를 4,151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평안남도 속천군안 열두삼천농장과 약전농장, 칠리농장 현지요해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외교차관 통화...미 국무부 부장관 “한·일 관계개선 노력 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현동 외교1차관-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유선통화를 통해 한·일 관계를 비롯한 한·미동맹 70주년·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 방미,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양국 경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 - 셔먼 부장관,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 • 제9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SD)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아트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 전력비축유 방출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해 협의 - 전력망·에너지 인프라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사이버 안보 강화 방안 논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성, 美 대북제재 대상자 전일호, 김수길, 유진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고시
3. 18. (토)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여러 성, 중앙기관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3.14.~17.)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성, 룡해운성, 평양건설위원회, 국가과학위원회, 문화성, 체육성 당위원회 • 2023년 봄 전국체육축전 개막(3.17., 청춘거리 농구경기장)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성학(내각 부총리) 등 참석
	일·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독 도쿄서 정상회담 개최,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1월 개최한 2+2 회담을 포함하여 안전보장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진전한 것을 환영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
3. 19. (일)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언론성명(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비열한 《인권》압박소동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엄중한 도전으로 낙인하면서 단호히 규탄배격” •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의 3월 17일 발언은 “국가에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또다시 부당하게 걸고드는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함. •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표가 3월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발언한 것은 “유엔헌장에 대한 훼손이며 인권에 대한 우롱”이며 “《인권옹호》의 허울을 쓰고 자주적인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발언함.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北,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로 약 8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19. (일)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과 연계해 사전 계획 - 한국 F-35A, F-15K 전투기 및 미국 F-16 전투기, B-1B전략폭격기 참여
	한·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북핵대표, 北 미사일 규탄…"안보리서 긴밀 공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유선통화를 통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임을 지적 - 3국 수석대표는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안보리 회의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태사령부, 北 미사일 발사 관련 "즉각 위협 아니지만 불안정 유발 불법행위" 성명 통해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언급 -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
	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동해 상공에서 각종 전술훈련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미군 전략폭격기 B-1B 2대, F-16 전투기 4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4대 참여
3. 20. (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핵반격 가상종합전수훈련 지도(3.18.~19.)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일 전술핵공격 모의 탄도미사일발사훈련에 강순남(국방상) 등 참석, 딸 동행 •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평양시와 각 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의 진행(3.15.~19.) 보도 • 김덕훈(내각 총리), 황해북도 수안군 신계군, 황해남도 해주시 강령군 옹진군 등 농업부문 사업 현지요해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해군 및 해병대, 쌍룡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 - 5년 만에 사단급으로 규모 확장 및 영국 해병 특수부대 코만도 1개 중대도 처음 참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정부, 3번째 인권보고서 발간 "北, 김씨 일가의 권위주의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정권 수립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면서 북한 당국이 국내 안보기관인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 국가보위성, 군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면서 이들 부문이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고 지적 - 보고서는 또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인,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주의적인 대우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캄보디아 연합군사훈련 '금룡-2023' 캄보디아서 실시
	중·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 러시아 방문,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3.20.~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시대 포괄적 전략동반자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 '2030년까지의 중·러 경제 협력 중점 방향 발전 계획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20. (월)	중·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의 관계는 군사·정치동맹적 성격이 아니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음...핵심 이익, 최우선 주권, 영토 보전, 안보와 개발 문제를 수호하는 데 서로 굳건히 지지 -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을 반대...모든 형태의 패권주의, 단독주의, 힘의 정치에 반대...냉전적 사고방식, 진영대결, 특정 국가를 겨냥한 소규모 동맹 반대 - 핵전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핵보유국 간의 어떠한 무력충돌도 피할 것을 촉구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도 뉴델리서 정상회담 개최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하여 '규칙기반질서' 유지 및 강화와 '남반구'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
3. 21. (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국제사회 최초의 인공위성 분야 감시대상품목 목록 발표 및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 외교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watch-list)」 목록 발표 - 동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탐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 -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 △불법 금융활동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 -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 및 △북한 노동자 송출·관리,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 • 정부, 지소미아 관련 일본에 서면 통보 -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 일본 측에 보낸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 - 두 건의 공한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2019년 11월) - 당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측에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및 효력 정지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 분야 후속조치 이행 상황 평가 및 전방위적 우주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 • 미 공군장관 5년 만에 방한...공군총장과 인태 안보 환경 논의 - 정상화 공군참모총장-프랭크 켈들 미 공군성 장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군사협력 방안 논의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비상위기 대책위원회 소집(3.21.) 보도 - 김덕훈(내각 총리), 전현철(당중앙위 비서) 회의 지도 및 강순남(국방상) 등 참석 - 자연재해위기 관리사업정형과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 성원들의 사업정형 등 논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 진행 - 인민보건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수정보충 정령 채택
3. 22. (수)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조선중앙통신) -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표가 3월 20일 CVID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발언은 "미행정부의 영상을 처참하게 훼손시키는 망신스러운 짓거리"이며 "우리에 대한 핵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라고 단언 • 김정은, 라오스 인민혁명당 창건 68주년 관련 라오스 총비서(통론 싸쑤릿)에게 축전 발송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22. (수)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北, 함경남도 흥남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차례 발사”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일본 방문(3.2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7차 핵실험 반드시 할 것”(아사히 신문 인터뷰) - 북한의 군사력은 국제사회에 위협되기에 충분한 상황이며, 7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물리적 준비가 모두 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힘. - 통일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18년 만임.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 방한…쌍룡훈련 등 한·미 협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계환 사령관-윌리엄 저니 미 태평양 해병부대(MARFOPAC) 사령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 해병대 협력 방안 논의 - 저니 사령관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및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 훈련 ‘쌍룡훈련’에 참가하는 미 해병부대 작전 지도를 위해 방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C 전략소통조정관, 북의 핵 공격 임박했다’ 문자 “징후 없어…면밀히 감시 중”(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실제로 그런 종류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만한 정보나 징후가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 최대한 면밀히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다”고 답변
	일·우크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키우서 개최, ‘특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에 전력, 지뢰처리, 농업 등의 분야에 대해 총 71억달러의 지원을 실시… 그 외 에너지분야 무상지원 4.7억달러, NATO신탁기금을 통한 비살상무기 3천만달러 지원 결정 - 기시다 총리,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G7서밋에서도 강하게 메시지를 보낼 것’
	일·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총리 폴란드 방문, 폴란드 총리 및 대통령과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폴란드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크라이나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에 직접ODA로 공여할 것을 언급 - 폴란드 총리는 양국의 에너지 분야 및 방위협력, 교류가 진전된 것을 환영하며, 일본 기업의 투자 증대를 기대한다 언급
3. 23. (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부적절”(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가 한·일 군사동맹인지와 관련해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힘. - 지소미아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힘. • 외교부, “정부는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하야시 일본 외무상 회담 및 마쓰노 관방장관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을 제안 - 일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 -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한·일 간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23. (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방어적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다…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멈추고 빨리 정치적 궤도로 돌아가야 함.”
	중·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4월 30~31일 중국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체스 총리는 서방 주요 국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시 주석과 중재안을 논의하게 되며, 하반기 EU 이사회 순환 의장국으로 외교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산업성,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레지스트(포도레지스트) 對韓 수출규제 해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16일 진행된 한·일수출관리정책대화의 결과
3. 24. (금)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 목적의 발사목적 훈련 지도(3.21.~23.)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수중공격무기체계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21일에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핵무인 수중공격정이 출발하여 23일 오후 홍원만수역의 목표점 도달 - 22일에는 전략순항 미사일 부대들의 전술핵공격 임무수행 절차 및 발사훈련 진행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도발에 맞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한·미, 한·미·일 안보협력 공고화” • 통일부, 2007년 대북차관 만기 상환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 원리금의 최종 상환 만기일이 오늘(3.24.) 도래했다고 밝히며 상환 의무 이행 요구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 첫 시행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과 면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위원장,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 및 다케다 료타 간사장 면담 - 통일·대북 정책 관련 통일부와 일본 정부 간 협의 채널 정례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
3. 25. (토)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 전국신발전시회-2023 개막(3.24., 평양역전백화점)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성혁(내각 부총리) 등 참석 및 김창석(경공업상) 개막사
3. 26. (일)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주석(통룬 씨쑤릿), 김정은 위원장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중·온두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온두라스, 베이징서 ‘중국과 온두라스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두라스 외무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에 단교 통보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나,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는 국제 안보를 침해하는 것이며 벨라루스 국민의 의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 - NATO를 비롯한 서방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내며 결정 재고 촉구
3. 27. (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北,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발사”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27. (월)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함, 이지스 구축함 웨인 메이어함, 디케이타함 등으로 구성된 미국 제11함모강습단과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구축함 최영함 등이 함께 항모 호송 훈련 및 방공전 등 진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마잉주 전 총통 중국 방문(3.27.~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0.)쑹타오 중국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 주임과 회담, '하나의 중국을 견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적극 추진'
3. 28. (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핵무기 병기화사업 지도(3.27.)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승무(당중앙위 제1부부장) 등 참석, 핵무기 연구소의 최근 사업정형과 생산실태 보고 - 김정은은 새로운 전술 핵무기들의 기술적 제원 및 구조작용 특성, 각이한 무기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 요해 및 핵반격 작전계획 및 명령서 검토 • 중부전선 군부대에서 미사일 발사훈련 진행(3.27.)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일총국 지도로 시범사격훈련 진행, 군부대 직속 교육중대 동원, "지대지상 전술 탄도미사일 2발로 핵공중폭발 타격 방식 교육시범사격 진행" - 교육중대는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 상공 500m 전투부를 공중폭발" • 수중 전략무기체계 시험 진행(3.25.~3.27.)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 오후 "원산만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형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6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형침로를 41시간 27분간 잠행하여 3월 27일 오전 예정목표 구역인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에 도달" • 김덕훈(내각 총리),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요해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국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 관련,尹 대통령,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날뉘어 드러나야"(국무회의의 모두발언) - 통일부,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제11함모강습단 단장,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 부산 작전 기지 입항, 미 항공모함의 국내 입항은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이후 6개월 만임. - 단장, "북한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다양한 수단이 있다"... "어떤 영역에서도 공격 가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C 전략소통조정관, 북한의 전술핵 공개에 "동맹 안보 위해 군사역량·태세 갖출 것"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커비 조정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기 공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외교적 방법을 찾기 위해 북한 정권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변 - 이어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계속 밝히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와 대화 테이블에 앉아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
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워싱턴서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배터리 제작 시 필요한 광물이 주 대상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28. (화)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아오포럼, 하이난서 개최(3.2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창 총리 개막식 기조연설(3.30.), '개혁·개방에 전념하며,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 반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2023.4.~2024.3.) 국가예산안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방위비 26% 증가, GDP 대비 1% 초과
3. 29. (수)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주재 쿠바 특명전권대사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정호(대외경제상), 서호원(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고명훈(조선쿠바단결위위원회 서기장) 등 배석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북한 지역으로의 침투를 가정한 '결정적 행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연합합륙훈련인 '쌍룡훈련'의 핵심인 '결정적 행동(decisive action)' 훈련 진행 - 훈련에는 미 해병대, 영국 해병대 코만도 병력을 포함하여 총 1만 3,000명이 참가 - 해군 대형수송함 독도함·미 해군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 F-35B 전투기·아파치 공격 헬기·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상륙돌격장갑차 등 군함 30여 척, 항공기 70여 대, 지상 전력 50여 대 투입
	한·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호, 첫 국장급 지역전략대화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호 국장급 지역전략대화에서 한국, 미국, 호주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행과 역내 주요 관심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우정엽 외교전략기획관,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개리 코언 호주 외교통상부 북남아국장 참석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한 정례 핵전력 훈련 시작 선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차이잉원 총통 미국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재대만협회장 겸 NSC 중국·대만 선임국장, 뉴저지 주지사 등과 만남...허드슨 연구소 주최 행사 참석 및 연설
3. 30. (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작성되었지만 북한 반발 및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이유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음. -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유권 및 사회권, 여성·아동·장애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을 기술 •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개편, 북한인권증진과·안전지원과 신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 폐지 및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정착안전정책관 신설 - 정세분석국에 정보공개서비스과·사회문화분석팀 신설 및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 정보공개센터장 신설 -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개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폐지, 분장사무 일부를 남북회담본부로 이관 - 남북회담본부의 회담2과 및 회담3과를 통합하여 경제인도회담과로 개편 및 회담운영 연락과를 회담운영과와 남북연락과로 분리 - 통일정책실에 통일미래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 통일기반조성팀 신설 • 국가정보원, 北 해킹 공격 관련 對국민 보안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금융보안인증 소프트웨어(S/W)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 PC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 등 해킹 공격 - 작년 말 북한이 국가·공공기관 및 방산·바이오업체 등 국내외 주요 기관 60여 곳의 PC 210여 대 해킹 사실 확인

일자	구분	주요 내용
3. 30. (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러시아에 북한 무기 판매 시도한 슬로바키아인 제재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국적의 아소트 므크르티체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북한의 관리들과 함께 20여종의 북한 무기 및 군수품을 러시아에 판매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로부터 무기 제공의 대가로 상업용 항공기를 비롯해 원자재, 상품 등 다양한 물자를 받아 북한에 제공할 계획 -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자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내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 역시 전면 중단됨. • 국무부, 북·러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무기상 제재…“대러 전쟁지원 좌시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성명에서 므크르티체프의 제재를 거론, 그가 상업용 항공기에 서부터 원자재와 상품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보내질 물건들과 교환하려 24가지 이상의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 -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을 지원하는 이들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명확한 메시지”라며 “우린 북한 또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기타 국가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NSC 전략소통조정관, “러, 북한에 탄약 추가확보 추진 및 식량제공·대표단 파견 모색”(전화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커비 조정관, 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하는 러시아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약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새 정보가 있다고 언급 - 이어 “(북·러 간) 거래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24개 이상 종류의 무기와 탄약을 평양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또 러시아가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과 러시아가 탄약의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 • 국방부, 한국 핵 재배치 관련 “한반도 비핵화 유지…확장억제 집중”(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최근 상원의원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 검토를 언급했다는 지적에 “물론 우리는 항상 의화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의 현재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로, 현시점에서 우리의 정책을 지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 -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중국 같은 국가로부터의 침략 억제를 보장하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 역내에서 한국 동맹 및 우리 파트너들과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우린 계속해서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커페이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러시아와 상호 군사적 신뢰를 강화하고, 합동 해상·공중 순찰과 훈련을 추가 조직할 것’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릴열도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UN 안보리 4월 의장국으로서 안보리에서의 군수품 수출 협정 위반 및 다자주의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임을 발표 •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미국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구금, 기사가 미국 지시 따라 군산복합기업 기밀정보 수집 주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집행위원장, 방중을 앞두고 우크라이전이 EU-중국 관계 결정적 요소임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뤼셀에서의 콘퍼런스 연설을 통해, 중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
3. 31. (금)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야시 외무상 정례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간의 안보대화 및 차관 전략대화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기 위하여 조정 중 - 각 부처 간 한·일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II

북한 매체 주요 보도

1. 대 내

■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2.27.~3.2.)

- 노동신문은 2월 27일부터 3월 2일에 걸쳐 2월 26일~3월 1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1일차 회의(2.26.)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회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새 시대 농촌 혁명강령 실현의 첫해인 2022년도 사업정형을 분석총화하고 당면 과업과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도를 토의·결정할 것이라고 보도
 - 2일차 회의(2.27.)에서는 당의 농촌발전 전략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원인 및 대책, 인민경제계획 수행규율의 철저한 확립, 국가재정금융사업 개선을 위한 당면 문제 등이 의정으로 상정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과업과 목표, 방도를 찾는 것이 이번 회의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
 - 3일차 회의(2.28.)에서는 당·정 간부들의 지도하에 당의 농촌발전전략과 경제 정책 실행을 촉진할 수 있는 과학적·현실적·동원적 대책안 수립을 위한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가 진행
 - 3월 2일 종합보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2022년도 사업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의 분석과 평가를 발표하고, 결론 《올해 농사에서 나서는 당면과업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에 대하여》를 진행하였다고 기술
 - 김정은 위원장은 결론에서 당은 농촌 문제를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 위업 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 문제로 증시해왔다고 발언하고, 폐회사를 통해 농업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2대 분야이며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농촌을 사상 정신적·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 회의에서는 의정인 1)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 정형과 일련의 중요 과업들에 대하여, 2) 인민경제계획 수행규율을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 3)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4) 조직 문제를 전원일치로 승인

■ 당중앙위 제8기 제14차 정치국회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3.2.)

- 노동신문은 3월 2일 전날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당중앙위 제8기 제14차 정치국회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조용원 당중앙위 조직비서가 회의를 사회하였으며,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석
- 당중앙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 제기된 의견에 기초하여 농업발전계획과 중요 경제문제를 반영한 결정서 초안들을 심의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완성본을 전원회의에 보고할 것을 결정
- 또한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의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

■ **김정은, 화성포병부대 현지지도 및 화력습격훈련 참관(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3.2.)**

- 3월 10일 노동신문 1~2면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의 화성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고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군인들의 전투정치훈련 실태와 군부대의 중요작전임무 행동질서 및 무기체계 운용 능력을 요해
 - 또한 서부전선 방면의 적 작전비행장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 관하 제8화력습격중대의 실전대응태세를 판정검열
 - 화력습격중대는 “적 작전비행장의 주요 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 서해상의 목표수역에 위력적인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대응능력을 자신감 있게 과시”하였다고 보도
 - 김정은 위원장은 훈련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실전가상훈련을 다각적으로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 2대 임무 수행에 최대의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엄격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

■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5차 확대회의의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3.12.)**

- 3월 12일 노동신문 1면은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5차 확대회의의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이 회의를 지도하였으며, 당중앙군사위 위원들과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각 군종·군단 지휘관들이 참석하고 당중앙위 해당 부서 간부들이 방청
 -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주요 전력들에 인민군대를 파견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투쟁을 조직·전개할 것과 군대의 중요 정치군사 활동 방향 및 대책적 문제를 토의
 - 당중앙군사위는 사회주의 위업 실현에서 최종대사인 농촌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농촌건설 진행 실태를 재확인하고,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목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를 회의 핵심사안으로 상정

- 회의에서는 또한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협계산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되었다”고 보도
-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의 창조대전은 당의 웅대한 실천강령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해온 우리 인민군대가 더욱 전진적이고 더욱 격동적인 투쟁으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사회주의 농촌 건설과 경제 발전에서 군대가 투쟁의 주체가 되어 제시된 단계별 목표들을 무조건 결사관철해야 한다고 강조

■ 전략순항미사일 수중 발사훈련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3.13.)

- 3월 13일자 노동신문은 전날 새벽에 진행된 전략순항미사일 수중 발사훈련 내용을 보도함.
 -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영웅함》이 12일 새벽 북한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
 - 미사일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7,575s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타격”하였으며, 발사훈련을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핵 억제력의 중요 구성인 잠수함 부대들의 수중대 지상공격 작전태세를 검열판정하였다고 보도
 - 당중앙군사위는 훈련 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본 훈련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통제·관리할 북한군의 불변한 입장이 명백히 표명되고 다양한 공간에서의 핵전쟁 억제수단들의 정상적 가동태세가 입증되었다고 선전

■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진행(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3.15.)

- 노동신문은 3월 15일 전날 미사일부대에서 진행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 내용을 보도함.
 - 미사일 시범사격 훈련은 구분대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군부대 관하 제 11화력습격중대가 참가하여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중등 사거리 체제로 발사하였고 611.4km 떨어진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방진동 앞 목표섬 피도를 정밀타격하였다고 보도
 - 군부대장은 “당의 훈련혁명 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화력습격중대들에 대한 훈련 강도와 요구성을 더욱 높여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화력습격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히 갖추어나갈 것”이라고 다짐

■ **김정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현지지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3.17.)**

- 노동신문 3월 17일 1~3면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로 진행된 《화성포-17》형 발사훈련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훈련은 “적들에게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위협적인 현실로 다가온 무력충돌 우려를 인식시키며 언제든 압도적인 공세조치”에 대응하는 실천적인 행동 의지이며, “핵전쟁억제력의 기동적이며 경상적인 가동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고 전함.
 -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은 최대정점고도 6,04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0.2km를 4,151s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목표수역에 탄착”했고 훈련이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함.
 - 김 위원장은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것이라고 대적 대응방침을 피력”했으며,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엄숙한 천명을 다시금 상기”시킴.

■ **김정은,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지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3.20.)**

- 노동신문 3월 20일 1면은 18~19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로 진행된 종합전술 훈련의 사진과 기사를 게재함.
 - 훈련은 “전쟁연습을 확대시키고 공격성이 짙은 군사행동을 람발하고 있는 적에게 보다 강경한 실전대응 의지와 경고”를 위해 진행됐으며, 18일에는 “핵타격 지휘 체계관리 연습과 핵반격 태세에로 이행하는 실기훈련”이, 19일에는 “모의 핵 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됨.
 - 발사 훈련에는 강순남 국방상과 전술핵 운용부대 연합부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전술 탄도미사일은 “800km 사거리에 설정된 조선 동해상 목표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 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 번 검증”됨.
 - 김 위원장은 “실지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에라야 전쟁 억제외 중대한 전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함.

■ **김정은, 중요무기 시험과 전략적 목적의 발사훈련 지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3.24.)**

- 노동신문 3월 24일 1~2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로 21~23일에 진행된 자위적 핵역량의 신뢰성 검증 훈련의 사진과 기사를 게재함.
 -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 공격형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이 진행됨. 21일은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훈련에 투입된 핵 무인 수중공격정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침로를 80~150m의 심도에서 59시간 12분간 잠항하여 3월 23일 오후 적의 항구를 가상한 흥원만 수역의 목표점에 도달”함.
 - 22일은 “전략순항 미사일 부대들을 전술핵공격 임무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 시키기 위한 발사훈련이 진행”되었는데,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 2기와 《화살-2》형 2기는 조선동해에 설정된 1,500km와 1,800km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각각 7,557~7,567s와 9,118~9,129s간 비행하여 목표를 명중”함. 또한 “기종별로 각각 1발씩 설정고도 600m에서의 공중폭발 타격방식을 적용하면서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을 다시한번 검증”함.
 - 김 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며 “지역에서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연습 확대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며 더 큰 위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며, “무모한 반공화국 전쟁연습 소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 **김정은,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3.28.)**

- 노동신문 3월 28일 1면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 《핵방아쇠》의 정보화 기술상태 요해 사진과 기사를 게재함.
 - 핵무기 연구소는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핵무기 발전 방향과 전략적 방침에 따라 공화국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 년 간의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했으며, 김 위원장은 “핵무기 적용수단과 작전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르는 새로운 전술핵무기들의 기술적 제원 및 구조작용 특성, 각이한 무기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핵반격 작전계획과 명령서들을 검토”함.
 - 지도에는 홍승무 당중앙위 제1부부장이 동행하였으며, 김 위원장은 “당의 핵력량 증강로선은 철두철미 국가의 만년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발언함.

2. 대 외

■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3.5.)

- 3월 5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이 전날 한미 연합 훈련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 내용을 보도함.
 - 2월 24일 한미 국방부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는 보도문을 발표한 것과 3월 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군훈련이 실시된 것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의 이러한 무책임한 긴장격화 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
 - 유엔이 그동안 “지구상의 그 어떤 사소한 분쟁과 충돌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다가도 주권국가의 “정권종말”까지 공언하는 한국과 미국의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와 화약내 짙은 무력시위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대해 유감 표명
 - 유엔과 국제사회가 한국과 미국에게 도발적인 언행과 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한반도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

■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3.7.)

- 조선중앙통신은 3월 7일 김여정 당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를 보도함.
 -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월 24일 ‘북한이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 즉시 격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한국 언론의 3월 6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 유무, 리유 여하를 떠나 명백히 사전경고해두려고 한다”며 “태평양은 미국이나 일본의 령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발언
 - 이는 “엄청나고 미친 망발”이며, 미국의 관할권이 아닌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북한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를 경우 “두말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
 -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있으며, 북한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경고

■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3.7.)**

- 조선중앙통신은 3월 7일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이 전날 발표한 담화 내용을 보도함.
 - 3월 6일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B-52가 동원된 한미 연합공군훈련이 진행된 것은 “조선반도 지역정세를 헤어나기 힘든 구렁텅이로 보다 깊숙이 밀어넣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며, 이번 훈련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핵 사용 기도가 실천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
 -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이라는 국제사회의 바람과 배치된 한국과 미국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 위험이 “가상적인 단계로부터 현실적인 단계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비난
 - 또한 3월 13일부터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의 침략적 성격과 그로부터 초래될 “파국적인 정세 격화”를 경고하고,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지체 없이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표
 - 국제사회는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북한의 “평화 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하여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

■ **김정은, 중국 시진핑 주석 3연임 관련 축전 발송(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3.11.)**

- 3월 11일자 노동신문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관련하여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발송한 축전 내용을 보도함.
 - 시진핑 주석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국가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 것에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이는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의 높은 신뢰와 지지의 표시”라고 기술
 - 해당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중국공산당은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영도를 확고히 실현하고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축하
 - 오늘날 북한과 중국은 지지와 연대를 긴밀히 하면서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북중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염원과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게 변함없이 심화발전될 것을 믿는다고 기술

■ **외무성 성명(조선중앙통신, 2023.3.13.)**

- 조선중앙통신은 3월 13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관한 외무성 성명을 보도함.
 -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3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이 “추종세력과 함께

-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모임이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별려놓으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
- “미국의 비렬한 《인권》 압박 소동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발표
 -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인권》 책동은 진정한 인권보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조선인민의 진정한 권리와 리익을 말살하기 위한 가장 정치화된 적대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난
 - 인권은 곧 국권이고 국권 수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북한은 국가의 자주권과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장 비렬한 적대모략 책동에 초강력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한다”고 발표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언론성명(조선중앙통신, 2023.3.19.)

- 조선중앙통신은 3월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의 북한인권 논의에 대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성명을 보도함.
 - 북한 대표부는 미국의 인권 압박이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엄중한 도전으로 락인하면서 단호히 규탄 배격”하며,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제도전복을 추구하는 내정간섭 도구로 악용”된다고 밝힘.
 - 또한 “유엔 무대에서 너절한 대조선 《인권》 음모판을 별려놓음으로써 저들의 《인권》책동이 다름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길잡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며, 이러한 책동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응징”하려는 의지가 철저하고 명백하다고 피력

■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3.19.)

- 조선중앙통신은 3월 19일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이 17일 ICBM 발사에 대해 규탄한 것을 비난하는 김선경 부상의 담화를 게재함.
 - 담화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처사가 지역의 긴장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붙는 불에 기름을 치는 것”이고, “미국에 무턱대고 추종하는 천성적인 굴종 심리의 발현”이라고 비난함.
 - 더불어 “유엔사무총장이 계속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행위에 편승하는 경우 자기의 정치적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고, “합법적인 자위적 대응조치”를 유엔 안보리에 올려 놓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순한 시도들이 감지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경중”을 올림.

■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국장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3.19.)

- 조선중앙통신은 3월 19일 유엔주재 미국 대표가 17일 북한인권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조철수 국장이 비난하는 담화를 게재함.
 - 담화는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렬한 반공화국 《인권》 모의판을 벌려놓음으로써 인권대신 강권을, 평화대신 전쟁을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이 얻을 것은 “불가역적인 안보 불안정”이라고 비난

■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국장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3.22.)

- 조선중앙통신은 3월 22일 유엔주재 미국 대표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인권문제를 언급한 데에 대한 조철수 국장의 담화를 게재함.
 - 조 국장은 “우리에 대한 핵포기 강요는 곧 선전포고”이고 누구든 “COVID를 적용 해보려 든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 될 것이라고 강조함.